

중 우한시 귀국한 내국인 중 광주·전남 거주자 25명

광주 14명·전남 11명...우한폐렴 잠복기 14일간 전수감시 진행

“매일 전화로 꼼꼼이 확인...감염증 예방과 확산방지 위한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내국인 중 광주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25명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 3023명 중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수감시 대상자는 14명, 전남은 11명으로 집계

됐다고 29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이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진행, 각 시도별로 전수감시 대상자 목록을 내려보냈다. 일본은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20일 이전 잠복기에 입국한 내국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23일 이후로는 우한시를 방문한 이들의 추적 모니터링이 진행된 탓

에 13일부터 23일까지 입국자가 대상이 됐다.

질본 지침에 따라 시·도 보건소는 전수감시자들의 거주지와 증상을 파악하는 등 증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전수감시는 우한폐

렴 잠복기인 14일간 진행된다. 조사관이 전수감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다 잠복기간 내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우한폐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관이 매일 유선전화로 조사항목을 꼼꼼이 확인하고 감염증 예방과 확산을 위한 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전 세계적 감염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한 가운데 28일 오후 마스크를 쓴 시민이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남 농수산물식품 지난해 ‘역대 최대’ 4억5천만 달러 수출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14.8%P 증가

전남도는 지난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6.2%P 증가한

4억5200만 달러로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29일 밝

혔다. 주요 수출 품목은 김, 전복, 오리털, 미역, 톳, 유자차, 분유, 배, 음료, 파프리카다. 최대 수출품인 김은 1억1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p, 미역은 2100만 달러로 20.4%p, 톳은 2000만 달러로 13.6%p, 분유는 1200만 달러로 63.2%p 각각 증가했다.

수출국은 주로 일본, 미국, 중국, 대만, 베트남이며, 5개국 총 3억 6800만 달러로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출의 81.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수출은 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4.9%p, 미국은 7800만 달러로 24.6%p, 중국은 7400만 달러로 40.9%p, 대만은 4200만 달러로 9.1%p, 베트남은 2400만 달러로 21.8%p가 각각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품은 일본의 경우 전복, 김, 톳, 미역, 파프리카 순이다. 미국은 김, 배, 음료, 전복, 중국은 김, 유자차, 분유, 오리털, 미역, 대만은 오리털, 배추, 김, 배, 베트남은 오리털, 오리고기, 전복, 배, 닭고기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해외 상설판매장 5개소를 추가로 개설하고, 아마존 온라인 쇼룸에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개장해 10개 품목을 신규 입점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신남방(인도, 아세안 10개국)·신북방지역(러시아, 중국, 몽골, 터키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기업의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했다.

허성은 기자

‘공수처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청구인 고위공직자 아냐”

현재 “공수처법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 없어”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청구인은 공수처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A씨가 “대통령에게 독재를 허용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진권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최근 각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심사 필요성이 있는지, 청구가 적법한지 살피는 사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려 청구내용을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권

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 받은 자’는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취지”라며 “고위공직자가 아닌 청구인은 해당 법률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은 법률 중 어느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며 A씨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다가오는 입춘, 입춘방 써볼까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아 앞둔 29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북구노인복지센터 서예반 회원들이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원생들과 주민에게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라는 입춘방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